

도입 10년, 미니잡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독일 내 정책옹호자연합별 담론들

박 명 준*

I. 서 론

이 글에서는 독일 현지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치세력이 미니잡(Minijob)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입장들을 표출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니잡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계 각층별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기관이나 인물들과 보수적인 성향의 기관이나 인물이 일정하게 대립된 견해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미니잡 비판론과 옹호론으로 정책옹호자연합(advocacy-coalition)을 나눌 수 있다. 특히 작년에 미니잡 탄생 10년을 기점으로 그에 대해서 평가와 향후 전망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여 그 내용들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각 진영 내부에서 전문가와 싱크탱크,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 등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입장을 어떠한 논리로 표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가능한 독일어로 된 문서의 분석작업과 보도자료를 활용했다. 주로 각 기관들이 그동안 발간한 문서들 가운데 미니잡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내용, 각 기관의 인물들이 발언한 내용, 그리고 특히 지난 2013년 하반기의 총선거 당시 제출된 입장들을 담은 문서 등이 주를 이룬다.

국내에 미니잡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었으나 주로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또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것의 찬반론에 대한 독일 내에서의 의견들을 풍부하게 개진한 경우도 사실상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 부분의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의 판단을 돕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미니잡 비판론부터 소개하고, 이어서 옹호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mjnpark@kli.re.kr).

Ⅱ. 미니잡 비판론

대체로 비판론은 친노조적인 싱크탱크나 그러한 성향의 학자들, 사회민주당, 녹색당 및 좌파당 등 좌파블럭의 정당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체들이 하나의 옹호자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1. 연구자 및 연구기관

미니잡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비퍼만(Wippermann) 교수는 미니잡과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간행한 바 있다(2013. 11).¹⁾ 이것은 현재 미니잡을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미니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8~64세 여성 2,0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내용은 미니잡이 과연 여성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미니잡 수행 이후의 직업활동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애초에 미니잡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미니잡이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과 납세의 의무를 지나는 고용을 향한 교각으로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비퍼만 교수는 “미니잡은 정규의 생활보장적 고용관계로 나아가는 교각으로서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현재 미니잡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경미고용을 수행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에서 재교육 중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태 등”이기 때문이다. 비퍼만 교수는 “미니잡을 수행하는 이들은 주로 여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를 고착화시키고, 향후 남녀 간의 연금수령액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특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기혼여성들이 미니잡에 대한 매력을 더욱 더 크게 느끼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니잡을 수행한 경험을 지닌 여성들은 그 일자리의 조건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미니잡여성(Minijobberin)”이라고 하는 직업상의 자기가치의 폄하를 경험하고 있다. 미니잡만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의 경험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미니잡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자격을 갖춘 숙련자”로 간주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미니잡은 그 수행이 지속될수록 “미니잡여성”이라고 하는 탈숙련자로서 폄하된 이미지를 발생시켜 내고, 이것은 이어지는 직업활동의 경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미니잡이 가진 교각 기능을 현

1) http://www.equalpayday.de/fileadmin/epd/Dokumente/Toolkit/Toolkit_2014/Nov_2013_Wippermann.pdf

실화하는 것이 시급히 설정해야 할 목표이며, 그러한 개혁은 양성평등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비퍼만 교수의 결론이다.

독일노총(DGB)과 깊이 연계된 공익재단인 한스뵘클러재단 산하에 있는 친노조적 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소(WSI)는 독일 내 미니잡의 폐해를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신랄하고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일단 미니잡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지닌다. 구직자는 세금 없이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미니잡의 비율에 대한 법적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미니잡은 일종의 특별한 위상을 가지나, 그러한 특별지위는 노동시장에서 몇 가지 측면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그 수행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둘째, 주로 서비스업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특정인들에게는 접근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셋째, 미니잡 수행자가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주업(Hauptjob)에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보다 그 액수가 적다.

또한 미니잡은 기업 현실에서 일종의 탈출요건(Exit-Option)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제한과 현실에서의 적용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잡 수행자들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일치(Brutto gleich netto)”라고 하는 모토는 사실 환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노동관련 법률상에 명시된 권리(휴가금 지원, 업무 교육, 노조 결성 등)를 보장받지 못한다. 미니잡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법령에서와 똑같은 실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니잡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폐지되어야 한다(WSI-Mitteilung 2012년 1월호).²⁾

독일연방고용공단(BA) 산하의 노동시장 전문연구기관인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연구소(IAB)’는 미니잡이 정규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회사에서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소규모 사업주는 사업장을 작게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미니잡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회사들의 경우는 정규직의 수가 증가하면 미니잡의 수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IAB-Studie³⁾).

2. 정 당

친노동계 정당인 사회민주당도 미니잡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우선 미니잡 수

2) http://www.boeckler.de/wsimit_2012_01_voss.pdf

3) <http://doku.iab.de/kurzber/2012/kb2412.pdf>

행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임에 주목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미니잡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현실의 전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와 간병 부문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대부분 낮은 소득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켜 그러한 직업들을 금전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며, 미니잡의 오용을 제지할 것이다”(사회민주당 2013년 집권 프로그램 요약 - 2013년 4월 10일 전당대회 보고문).⁴⁾ “여성들이 미니잡 일자리의 약 3분의 2(6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미니잡의 남용과 싸우고 그것의 사회적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다”(사회민주당 2013년 9월 9일자 보도자료).⁵⁾

또 미니잡이 근래에 독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빈곤(Altersarmut)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바꾸려 한다. 선거 당시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마누엘라 슈베직(Manuela Schwesig)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니잡은 좋은 직업으로의 도약대가 아니라 여성과 노인을 빈곤에 몰아넣는 시장정책의 쓰레기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비판하며(2012. 9),⁶⁾ 여성사회민주주의자연합(ASF) 대표 엘케 페르너(Elke Ferner)도 “노인빈곤과 임금 불균형을 불러온 명백한 원인은 시간제 근로와 미니잡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계비를 벌고, 노년에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법과 미니잡의 개혁, 그리고 법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한다”고 비판의견을 표명하였다(2013. 3).⁷⁾

전망과 관련해서 사회민주당은 미니잡의 철폐를 주장하기보다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는 현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회민주당 집권방안 2013-2017).⁸⁾ 그 일환으로 미니잡의 오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을 세우려 한다. 슈베직은 “모든 미니잡은 서면의 노동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미니잡 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는 시간당 급여의 합계와 휴가 지원금, 산업재해 시 임금 지급에 관한 권리, 해약 고지기간 및 최고 노동급여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개혁안을 주창한 바 있다(2012. 9).⁹⁾ 지난 총선 이후 대연정 합의각서에서도 사회민주당은 “우리는 미니잡 수행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는 내용에 조인을 하였다(2013. 11).¹⁰⁾

또 다른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Die Gruenne)은 일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미니잡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들의 빈곤을 지속시키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다.

4) http://www.spd.de/partei/parteitag/95118/20130410_regierungsprogramm_parteitag.html

5) http://www.spd.de/presse/Pressemitteilungen/109146/20130909_gerechtigkeit_fuer_frauen.html

6) http://www.spd.de/presse/Pressemitteilungen/77186/20120927_schwesig_mini-jobs.html

7) http://www.spd.de/presse/Pressemitteilungen/92236/20130307_moderne_frauenpolitik.html

8) http://www.spd.de/scalableImageBlob/96686/data/20130415_regierungsprogramm_2013_2017-data.pdf

9) http://www.spd.de/presse/Pressemitteilungen/77186/20120927_schwesig_mini-jobs.html

10) http://www.spd.de/scalableImageBlob/112790/data/20131127_koalitionsvertrag-data.pdf

“7백만 명의 미니잡 인구 중 3분의 2는 여성이며, 그들 모두가 취약한 생활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나, 학생, 연금 수급자 등이 거기에 더하여 존재해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 에게 미니잡은 빈곤의 텃이 되고 있고, 적어도 고령자가 되었을 때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니잡만 가지고서는 독자적인 생존보장도, 미래의 연금 수급을 위한 독자적인 재원 축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펴는 정책의 목적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직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인간이라면 지녀야 할 품위”라는 것이다(녹색당 선거집권 프로그램 p.94).¹¹⁾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녹색당은 “현재 존재하는 미니잡의 처우를 개선하고, 미니잡을 제한하며, 끝내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급작스러운 폐지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혁모델을 구축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 걸음으로 미니잡의 확산을 차단하고, 현재 미니잡 영위자들의 고용조건을 즉각적으로 감지가능할 정도로 개선해 나가려 한다.” 또한 “단순히 미니잡을 폐지하는 일은 당장 작은 수입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소득층 섹터를 새로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모델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다. 거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들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미니잡을 더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녹색당의 미니잡 관련 원내 정책 제안, 2013. 4)¹²⁾13).

독일의 제도권 정당 가운데 가장 진보적 성향을 지니는 좌파당(Die Linke)은 미니잡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비판을 가한다. 지난 2013년 총선 당시 좌파당이 제출한 프로그램¹⁴⁾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니잡을 완전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우리는 미니잡을 처음부터 사회보장이 되는 정규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주당 18시간 미만의 기간제 근로를 역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좌파당의 당수인 그레고어 기지(Gregor Gysi)는 미니잡을 도입한 당사자들이었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까지 비판하며, 그들이 “실제로는 미니잡과 같은 취약고용의 소멸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2013. 9).¹⁵⁾

11) http://www.gruene.de/fileadmin/user_upload/Dokumente/Wahlprogramm-E-Teihaben-an-guter-Arbeit-Beschluss-BDK-04-2013.pdf

12) http://www.gruene-bundestag.de/themen/soziales/kleine-jobs-entlasten_ID_4388032.html

13) http://www.gruenebundestag.de/presse/pressemittelungen_ID_2000147/2013/maerz/arbeitsmarkt-handlungsbedarf-bei-arbeitslosen-und-minijobs_ID_4387965.html

14) http://www.die-linke.de/fileadmin/download/wahlen2013/bundestagswahlprogramm/bundestagswahlprogramm2013_langfassung.pdf

15) [http://www.die-linke.de/index.php?id=55&tx_ttnews\[tt_news\]=29327&tx_ttnews\[backPid\]=9&no_cache=1](http://www.die-linke.de/index.php?id=55&tx_ttnews[tt_news]=29327&tx_ttnews[backPid]=9&no_cache=1)

좌파당의 정치가인 악셀 트로스트(Axel Troost)는 미니잡이 초래하는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취약고용의 확대를 우려하며, “독일 내에 부업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분열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003년에는 1.15백만 명이었던 수가 2012년에는 2.6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정규직과 부업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수는 두 배로 증가하여 10년간 4.3%에서 9.1%로 증가하였다. 이 부업은 거의 대부분 미니잡이다”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미니잡이 독일 노동시장의 저임금화의 주범임을 꼬집었는데,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시간당 급여를 기초로 한 저임금 비율이 24.1%로 EU 17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적축, 흑적, 흑노 연정의 지난 10년간의 노동시장정책 개혁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제 일자리, 취약기간제 고용과, 계속 자라나는 미니잡 부문은 이러한 개혁으로 인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매우 성장하였다”(2013. 8)¹⁶⁾라고 하였다.

3. 노동조합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경우도 미니잡에 대해 비판을 전개한다. 노총 대표부의 일원인 분텐바흐(Buntenbach)는 “하르츠 개혁을 도입하게 되면서 미니잡이 1차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즉 “미니잡 수행자들의 한 달 수입과 지출은 똑같으며, 이들은 사회·제도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사회분담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자들은 2%의 세금과 28%의 연금, 건강보험 분담액을 내고 있으나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고용주”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미니잡을 택하지 못하도록 유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8.5유로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역설하였다. “지금껏 800유로까지 사회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던 노동자들은 소득수준에 맞추어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 800유로부터는 노사 모두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1유로만 되어도 노동자들은 완전한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미니잡은 일반적인 세금체계 안으로 통합되어 들어와야 한다”(Die Welt, 2012. 3. 15).¹⁷⁾

미니잡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서비스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집단적 이해에 보다 민감한 이해를 지니는 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는 미니잡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한 분석보고서에서¹⁸⁾ 베르디는 ‘한 번 미니잡은 영원한 미니잡’이라는 표제하에

16) [http://www.die-linke.de/index.php?id=55&tx_ttnews\[tt_news\]=28903&tx_ttnews\[backPid\]=9&no_cache=1](http://www.die-linke.de/index.php?id=55&tx_ttnews[tt_news]=28903&tx_ttnews[backPid]=9&no_cache=1)

17)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924635/DGB-will-minijobber-aus-der-Armutsfalle-befreien.html>

18) <http://arbeitsmarkt-und-sozialpolitik.verdi.de/politikfelder/arbeitsmarktpolitik/++co++14980d2e-4bc9-11e3-a4db-52540059119e>

서 미니잡의 고착효과를 강하게 문제시하였다. “미니잡에서 정규직으로 도약하는 것은 매우 소수만이 가능한 일이며, 노동시장에서 미니잡은 교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니잡은 순전히 취약근로의 고위험을 가진 형태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문제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들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76%의 여성이 미니잡의 수행을 3년간 지속하고 있고, 14%의 여성만이 미니잡을 수행한 이후 사회보장이 연계된 정규일자리를 얻었다. 미니잡 수행을 지속하는 여성은 ‘미니잡여성(Minijobberin)’이라고 하는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다. 미니잡에 길게 종사하면 할수록 정규고용 관계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진다. 미니잡이 지속될수록 치명적으로 탈숙련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미니자버린’의 자화상과 타인상은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의 일자리로의 이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베르디는 미니잡 수행자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 천착하여 미니잡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에는 그러한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독일 사회 내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하며, “경미고용관계에도 완전한 분담금 의무로의 전이가 필요하다. 사적인 가게에서의 고용규정에도 보다 많은 창의성과 참여를 부여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동시장정책과 평등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등의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Ⅲ. 미니잡 옹호론

대체로 독일의 공론장에서 미니잡 비판론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니잡의 기능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유지 내지는 확대를 주창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게 구축되고 있다. 옹호론은 친자본적인 싱크탱크와 그러한 성향의 학자들,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연합 및 자유민주당 등 소위 우파블럭의 정당들,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친사용자적 이익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싱크탱크 쾰른경제연구소(IW-Koeln)와 정당 중에서도 특히 자유민주당(FDP)의 논리를 중심으로 미니잡 옹호론의 주된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쾰른경제연구소

쾰른경제연구소는 독일의 싱크탱크 중에서 상대적으로 친자본, 친사용자적 입장에서 노동과 복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량 있는 연구기관이다. 이곳은 자신들이 정기

적으로 발간하는 분석자료들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미니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하면서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지를 개발해 왔다.

첫째, 쾰른경제연구소 측은 “독일의 전체 740만 명의 미니잡 수행인구 가운데 2백만~3백만 명이 또 다른 사회보험의무적인 정규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에게 미니잡은 추가의 소득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수단일 뿐이다(2010. 3).¹⁹⁾ 따라서 “미니잡 수행자들을 경미고용종사자(Geringfügig Beschäftigte)라고 칭하는 것은 오류이다”라고 주장하였다(2011. 1).²⁰⁾ “미니잡 수행자들은 주로 주부, 연금수급자, 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실업자인데, 이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집단들이다. 그들 가운데 학생이나 주부는 대체로 그들의 배우자 내지 파트너나 부모를 통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연금 수급자들도 재정적 난관에 봉착해서 강제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편이다”(2013. 9).²¹⁾

미니잡 비판론자들이 “미니잡은 직업에 있어 막다른 길이며, 근로자들은 더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미니잡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비판을 가하는 것에 맞서 쾰른경제연구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맞비판을 하였다. ① “회사가 정규직을 미니잡으로 전환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② “만일 노동자들이 미래에 자신의 임금 20% 이상을 사회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면 이 일자리에 대한 매력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미니잡 제도를 없애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것이다(2012. 7).²²⁾

둘째, 미니잡 폐지론자들의 또 다른 주장인 ‘정규직 대신 미니잡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미니잡이 ‘연금상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규직보다 미니잡의 수가 더 증가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며, “만일 미니잡이 완전한 사회보험의무하에 놓이게 된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상의 혜택이 생계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미니잡에 사회보험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2012. 12).²³⁾ 결국 미니잡이 폐지될 경우 미니잡 수행자들은 본인들 스스로 사회보험(soziale Sicherung)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나, 사실상 대부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니잡이 폐지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자

19) “Oft ein zweites Standbein”, iwd, Nr. 13, vom 31. März 2010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d/archiv/beitrag/31429?highlight=minijob>

20)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nachrichten/beitrag/minijob-studie-binsenweisheiten-60088?highlight=minijob>

21) “Viele Minijobber sind mit ihrer Arbeitszeit zufrieden” am Sep.2013,

<http://www.iwkoeln.de/de/presse/gastbeitraege/beitrag/holger-schaefer-in-der-fuldaer-zeitung-viele-minijobber-sind-mit-ihrer-arbeitszeit-zufrieden-127434?highlight=minijob>

22)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nachrichten/beitrag/minijobs-kritik-laeuft-ins-leere-87794?highlight=minijob>

23)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d/archiv/beitrag/minijob-im-interesse-der-beschaeftigten-99753>

동적으로 독자적인 사회보험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문제다. 그들의 연금은 생존을 보장할 수준에 못 미치게 될 것이기에 대부분의 미니잡 수행자들은 개별적인 연금보험을 원하지 않는다. 미니잡 제도의 폐지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미래에 소득의 20%를 사회보험에 지불해야 하는 무익한 꼴을 맞이하게 된다”(2013. 9).²⁴⁾

셋째, 여기에서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짧은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적은 수입”이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로지 미니잡 수행자들의 6분의 1만이 32시간 이상의 풀타임 정규고용의 수행을 원하고 있다”. 즉 “미니잡 폐지론자들은 정작 미니잡 수행자의 현실적인 이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012. 12).²⁵⁾ 비판론자들은 미니잡 수행자들이 경우에 따라 풀타임 일자리까지도 포함해서 근로를 더 길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미니잡 수행자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근로시간에 만족을 표한다. 나머지 절반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는 더 오래 일하고자 함에도 개인적인 정황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4분의 1의 경우만 더 일을 하고 싶음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하였다”(2013. 9).²⁶⁾

넷째, 만일 미니잡을 폐지할 경우 그것은 현재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에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기업에게 미니잡은 일차적으로 유연화의 도구이다. 반면 노동비용은 오히려 사회보험의무를 갖는 정규직보다 높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총사회분담금이 보통의 20%보다 높은 30%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니잡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가운데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2013. 9).²⁷⁾

요컨대, 이 연구소의 홀거 쉐퍼(Holger Schäfer)의 주장을 보면, “미니잡은 정규직 일자리를 갉아 먹는 것이 아니다. 일단 미니잡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 여하튼 미니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대개의 경우 부업으로서 매력적 지닌다. 비판자들은 노인의 경우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니잡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장이다. 빈곤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노인이 젊은이보다 나은 상황에 있음을

24) “Viele Minijobber sind mit ihrer Arbeitszeit zufrieden” am Sep.2013,
<http://www.iwkoeln.de/de/presse/gastbeitraege/beitrag/holger-schaefer-in-der-fuldaer-zeitung-viele-minijobber-sind-mit-ihrer-arbeitszeit-zufrieden-127434?highlight=minijob>

25)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d/archiv/beitrag/minijos-im-interesse-der-beschaeftigten-99753>

26) “Viele Minijobber sind mit ihrer Arbeitszeit zufrieden” am Sep.2013,
<http://www.iwkoeln.de/de/presse/gastbeitraege/beitrag/holger-schaefer-in-der-fuldaer-zeitung-viele-minijobber-sind-mit-ihrer-arbeitszeit-zufrieden-127434?highlight=minijob>

27) “Viele Minijobber sind mit ihrer Arbeitszeit zufrieden” am Sep.2013,
<http://www.iwkoeln.de/de/presse/gastbeitraege/beitrag/holger-schaefer-in-der-fuldaer-zeitung-viele-minijobber-sind-mit-ihrer-arbeitszeit-zufrieden-127434?highlight=minijob>

보여준다.” 또한 “미니잡은 수행자가 적은 시간을 일하는 만큼 회사 경영에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낮은 조건으로도 쉽게 구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미니잡 제도의 폐지는 결국 탈법고용시장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2012. 2).²⁸⁾

2. 정 당

기독교민주당(CDU)은 대체로 미니잡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니잡이 착취인지 추가소득인지, 미니잡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헤센주 주의회에서 서의 토론장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정치가이자 비스바덴시 주의원인 한스-위르겐 이르머(Hans-Jürgen Irmmer)는 미니잡 폐지론자에 맞서며, 그것은 “7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연관된 중차대한 일로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니잡 수행자들은 공공기관, 협회, 혹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경우 학생이거나 혹은 연금생활자이며, 그들에게 일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CDU의 정치가 슈테판 귀르트너(Stefan Grüttner)도 “미니잡이 고령자들에 대한 돌봄노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한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정책은 비사회적(unsocial)이다”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Die Welt, 2013. 9. 4).²⁹⁾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가장 강하게 역설하는 자유민주당(FDP)은 미니잡의 긍정성 역시 가장 강하게 주창한다. 그들은 미니잡을 파견근로나 시간제 근로와 함께 필요한 유연성을 고양시켜 1차노동시장으로 가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³⁰⁾ 자민당은 미니잡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며, 조사결과를 봐도 대다수는 미니잡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 특히 탈법고용시장의 확산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에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미니잡은 계속적으로 존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 자유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위르겐 렌더스(Jürgen Lenders)도 미니잡의 선부른 폐지의 위험을 우려하며, 그것이 탈법고용의 확산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자민당은 미니잡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당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요하네스 포겔(Johannes Vogel)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니잡 수행자의 대

28) Keine Gefahr für Vollzeitjobs - IWD - NR. 9 vom 29. FEB. 2012, <http://www.iwkoeln.de/de/infodienste/iwd/archiv/beitrag/minijobs-keine-gefahr-fuer-vollzeitjobs-24033?highlight=minijob>
 29) <http://www.welt.de/regionales/frankfurt/article119716271/CDU-kritisiert-Gruenen-Plaene-zu-Mini-Jobs.html>
 30) <http://www.fdp.de/Arbeitsmarktpolitik/549c190/index.html>
 31) http://www.fdp.de/files/4849/Aktion_Bewusst_w_hlen_.pdf

다수는 미니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은 풀타임, 파트타임을 막론하고 결코 사회보험의무적인 노동을 수행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미니잡은 현재 독일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니잡의 장점은 다양한 생활상태에 있는 여러 연령집단들에게 복잡하지 않게 일정액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미니잡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는 또 “미니잡 수행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다양한 집단들이다. 그들은 녹색당과 같이 미니잡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부담을 주면서 소득기회를 취하려 할 것이다. 미니잡의 폐지는 우리 사회 한가운데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익에 반한다”라며 미니잡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공격하였다.³²⁾ 자민당의 당비서인 니벨(Niebel)도 “미니잡의 폐지는 곧 학생, 대학생, 연금수급자, 계절노동자 및 모든 유연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주창한다.³³⁾ 나아가 자민당은 “미니잡을 보다 발전시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임금 제한액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그를 통해 미니잡 수행자들이 임금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DP 2013 선거프로그램 p.32).³⁴⁾

IV. 결 론

미니잡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대체로 이것이 남녀차별을 고취시키고, 고령자들의 빈곤을 조장하며, 정규직으로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자신들의 집권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지금의 상황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격적으로 개혁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쪽이며, 보다 급진적인 좌파정당과 노동조합들은 이 제도 자체의 폐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미니잡의 옹호론자들은 현실에서 미니잡 수행자의 적지 않은 수가 부업으로 이를 행하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쪽이다. 그들은 오히려 미니잡이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감초와 같은 긍정적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면을 강조한다. 기민당의 경우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어도 그것의 기능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고, 자민당의 경우는 이 제도의 폐지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더욱더 확

32) <http://www.fdp.de/Kritik-an-gruenen-minijob-Plaenen/4484c17767i1p406/index.html>

33) <http://www.welt.de/regionales/stuttgart/article118986581/CDU-und-FDP-gegen-Abschaffung-von-minijobs.html>

34) http://www.fdp.de/files/408/B_rgerprogramm_A5_Online_2013-07-23.pdf

대,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쪽이다.

독일 내에서 미니잡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쟁의 정황과 그 담론 내용상의 논리들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고민하는 정책당국자들과 관계자들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적 함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과 제도적 조건을 독일의 그것과 총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해야 정책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KLI**